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부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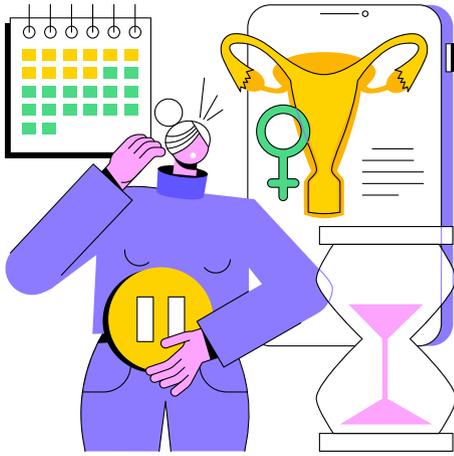
“그 나이에 생리하냐” 묻기 전에

요즘 동료 기자들과 기획 회의가 한창이다. 일간지를 만드는 곳에서 기획 회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마찬가지로이지만 조금은 특별한 기획 회의도 있다.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획 회의도 그렇다.

매일노동뉴스는 3년 전부터 젠더+노동팀을 꾸려 여성 이슈를 다루려 애를 쓰고 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노동, 특히 노사관계에서 여성 이슈는 아주 작은 부분에 그치기 일쑤다. 여성 문제를 주제로 한 젠더+노동팀의 기획 회의는 왓지떨다. “여성의 날 하루 정도는 아예 여성 관련 주제로 신문을 만들면 어때요?”라고 묻는 후배 기자의 눈이 빛난다. 기획 회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여성 이슈에 목말랐던 독자들에게 펼쳐낸 지난 기사들을 검토한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다. 2년 전 <피 흘리며 일하는 여성들>을 제목으로 단 월경노동권에 대한 기사다. 그때 우리는 월경을 단순히 생리휴가 주느냐 마느냐, 혹은 무급이나 유급이나 같은 문제로 환원하면 복잡적이고 다양한 일터에서 월경노동권의 경험을 포괄할 수 없다고 썼다. 그래서 월경노동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에서 건강권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생소한 월경노동권

나는 그때 완경기에 이른 여성들을 취재했다. 난소가 노화하면서 여성호르몬 분비가 멈추고, 일생 평균 450번 정도 돌아오는 월경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완경기라고 한다. 폐경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여성의 종말의 의미라는 듯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월경의 완성을 뜻하는 의미에서 완경이라



고 쓴다. 환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보통 40대 후반부터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무월경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면 환경으로 본다. 보통 4~7년을 환경기(갱년기)라고 한다. 월경하는 여성이지만 나도 취재를 하면서 처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만큼 환경에 대해 무지했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다.

생리와 마찬가지로 환경도 아주 내밀하고 사적인 문제로 치부한다. 하지만 직업건강 측면에서 '환경기'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대한폐경협회에 따르면 평균 환경 연령은 49.7세다.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환경 상태라는 의미다. 여성취업자로 좁혀도 5명 중 1명꼴로 환경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환경기 여성, 직업건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환경기 증상으로는 안면홍조나 우울증, 관절통과 근육통, 배뇨장애와 가슴 두근거림 등이 있다. 어떤 여성은 생리통이 전혀 없지만, 어떤 여성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 응급실을 찾는 것처럼 환경

기 증상도 여성마다 다르다. 어떤 여성은 부지불식간에 지나기도 하지만 어떤 여성은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또 어떤 여성은 산업재해로 난소를 상실해 뜻하지 않는 폐경을 겪기도 한다. 조기 폐경을 겪은 여성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장애등급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법원 판결이 있고서야 남성의 고환 상실과 같은 장애등급 7급을 부여했다.

환경에 무지한 일터 환경

우리는 사실 환경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를테면 환경 전 여성은 남성보다 심장병 발병 확률이 현저하게 적다. 학계에서는 생리를 할 때 관여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나쁜 콜레스테롤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거나 심장 세포의 생존능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심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 말은 일터에서 환경기 여성에게 심장질환 예방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적 요인인 야간노동, 교대노동, 살충제 같은 유해위험물질 노출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2년 전 취재 당시, 환경도 모성보호의 한 축으로 끌어안는 영국처럼 기업이 환경기 여성에게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제도적 대책을 고민한 적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경우 결혼·임신·육아로 고용단절을 겪고 40대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기 여성노동자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노동자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호'가 오히려 채용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일면 타당하다. 환경기 직업건강에 대한 관심이 먼저다. ☺